격무에 벼랑 끝 내몰리는 근로감독관들

노동자들 권익보호 주임무…정작 본인 삶은 보호받지 못해
적정 업무량 3배에 초과근무 일상화·실적 할당 압박 호소
노동정책 강화 속 업무 급증…우울증 시달리다 목숨 끊기도

근로자의 권익침해를 감시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극심한 격무에 시달리다 급기야 목숨까지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게 주임무인 근로감독관이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새 정부들어 노동자 권익이 강화되면서 관련 업무가 급증한데다, 핵심 정책인 업체를 상대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개인별 실적까지 강제 할당돼 초과근무가 일상이 됐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2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7층 자택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A(46·6급)씨가 투신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익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A씨는 갑자기 업무와 주거 환경이 바뀐데다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사건 수십건을 떠맡으면서 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익산지청에서 광주청으로 발령을 받은 지 10일 만인 지난달 23일 우울증에 따른 병가를 한달 간 내고 집에 머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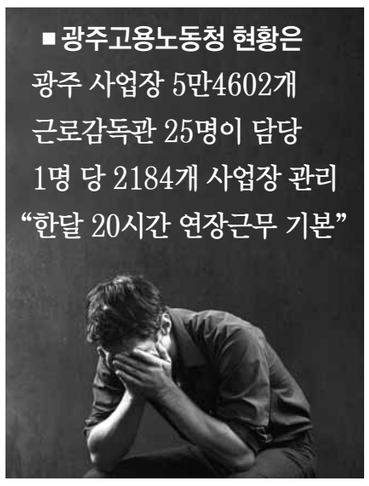
경찰조사결과 A씨는 병가를 낸 당일 익산의 한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과 함께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았으며, 동료 감독관들은 업무과중이 A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A씨가 숨지기 전 담당했던 사건은 90여건으로, 적정 업무인 20~30건의 3배나 됐다. A씨의 업무과중은 새 부서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기존 5명이 맡던 업무를 3명이 맡은 게 발단이 됐다.

A씨는 광주노동청 익산지청에서 산업안전업무를 담당하다 지난해 말 6급으로 승진한 뒤 지난달 12일 동료 4명과 함께 광주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전보 조치됐는데, 신규직원 2명이 교육을 가면서 전임자 5명이 맡고 있던 신고 사건이 A씨 등 3명에게 할당된 것이다.

근로감독관들은 신고 사건 외에도 임금체불예방, 사업장 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들의 적정 신고사건 업무를 20~30건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광주노동청은 근로감독관 25명이 광주지역 5만4602개 사업장, 노동자 42만8325명의 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1명이 2184개 사업장과 노동자 1만 7173명을 도맡고 있는 셈이다.



근로감독관 B씨는 "A씨의 경우 평소 접해보지 않은 업무를 갑자기 떠맡으며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담당 사건이 50건만 돼도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데 90여건이라면 매일 조기 출근과 야근을 반복해도 해결하기 힘든 업무량"이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 C씨는 "대부분의 감독관은 한 달 20시간 이상 연장근무가 기본일 정도로 평일에는 개인생활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면서 "특히 감독관의 신분이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사업주를 검거하기 위해) 밤낮없이 전국을 헤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C씨는 또 "신고 사건 대부분이 임금체불건인데, 경영이 악화돼 자금이 없는 사업주와 노무사 등을 동원해 체불사건에 대응하는 사업주도 많다"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청와대 신문고·감사원 등에 신고할 경우 해명자료까지 작성해야되기 때문에 업무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올해 근로감독관 565명을 증원할 계획이지만, 일선에선 업무량 감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근로감독관 D씨는 "새 정부 들어 노동정책이 강화되며 업무가 급증한데다, 직원을 충원한다 해도 또 다른 일거리가 생길 것"이라며 "오죽했으면 정부 인사교류 사이트에 전보를 신청할 때 괄호 안에 '노동부 제외'를 쓰는 공무원까지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D씨는 특히 "노동부에서 최근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배정하면서 이달 말까지 70%를 집행하라고 각 지방청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근로감독관마다 사업장 10여곳 씩 할당량이 책정돼 지원 대상 사업장을 찾아 다니느라 그나마 해오던 업무마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기상천외한 '고추 사기범'

휴대전화 4개로 목소리 변조…구매자금 2억여원 가로채

광주북부경찰, 40대 검거

휴대전화 4개를 이용해 목소리를 변조해가며 농산물 도매상에게 고추 구매 자금을 뜯어낸 40대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북부경찰은 건고추를 싸게 사주겠다며 농산물 도매상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A(55)씨로부터 56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A씨에게 접근해 최근 값이 3배 가량 오른 건고추를 구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물량 확보 차원에서 오씨의 거래 제안에 응했으며 과거에도 오씨와 건고추 거래를 한 적이 있어 큰 의심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고추가 대량으로 쌓여있는 사진까지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오씨의 제안은 거짓이었으며 실제 확보한 물량은 없었다.

오씨는 농민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며 A씨에게 선불금을 보내도록 했다. 이후 "고추를 싣고 오는 차량이 사고를 당했다", "농민이 빚을 쳐 사채업자에게 고추가 실린 트럭을 빼앗겼다"는 핑계로 고추를 보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 농민, 트럭운전사, 사채업자, 본인 등 목소리를 변조해가며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소리를 변조해 돈을 챙겨 달아난 사기범이 있다는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오씨를 붙잡았다

오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지난 2014년에도 광주·전남 농민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 벼 2281 가마를 가로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2월 출소했다.

경찰은 오씨가 평소 거래하던 A씨에게 목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범행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윤택 사건 본격 수사…출국금지 요청

경찰 "친고죄 폐지 전 범행도 처벌 가능"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고소장과 기록 등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보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12시간 동안 출국 금지되고 향후 법무부 승인 시 한달간 출국이 금지된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윤택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7일 올라온 이윤택씨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이날 20만명을 넘기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달내 20만명 참여'를 충족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악어의 눈물인가

고준희양 학대치사 피고인들 반성문 17번 제출 선처 호소

고준희(5)양 학대치사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많게는 17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준희양 친부 고모(37)씨는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고씨는 반성문을 통해 준희양을 방치·폭행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숨지게 한 것을 뉘우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동거녀 이모(36)씨는 2차례, 시신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씨 모친 김모(62)씨는 1차례 반성문을 썼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 중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의 경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7일 새벽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초등학교 앞 안전하게…노란 신호등 눈에 띄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정비 표준모델이 개발돼 5일 광주시 서구 풍암초등학교 앞에 설치됐다.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신호등 아래로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등 전국 돌며 저층 아파트 상습 절도 50대 검거

광주와 전남, 충남 등 전국을 돌며 저층 아파트를 상습적으로 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은 5일 "전국을 돌며 아파트를 턴 혐의(상습절도)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 들어가 귀금속 등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천안·아산·광주·순천·목포 등 전국의 아파트 30곳에서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1~4층 등 저층을 주로 노려 절도 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이 외출할 때 베란다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문 열린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서 "저층 아파트 주민들은 외출 시 베란다 창문을 꼭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짝사랑 여대생 방 궁금해"…여자기숙사 침입 '철없는 대학생'

쌍나팔

○…짝사랑하던 여자 동급생의 방이 궁금해 여자기숙사에 침입한 철없는 20대 대학생이 경찰서행.

○…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대학생 A(23)씨는 지난 2월13일 새벽 4시 40분께 광주에 있는 모 대학교 여자기숙사에 들어가 같은 과 여대생 B(24)씨의 방문에 설치된 디지털 개폐기를 열고 방에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

○…A씨는 디지털 개폐기 초기 비밀번호와 지정하기 쉬운 번호를 수차례 입력하는 과정에서 경보음이 울려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에서 A씨는 "평소에 눈여겨 보고 있는 B씨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궁금해 몰래 기숙사로 들어갔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7타경 10990	1	북구 동림용산로12, 401동12층1204호[동림동,동림푸른마을주공4단지아파트]84.79㎡	아파트	185,000,000 185,000,000	
2017타경 13562	1	광산구 장덕로6번길59, 102동 3층 302호 [장덕동,장덕마을부영애시앙] 84.8396㎡[노경진지분2분의1전부]	아파트	106,000,000 106,000,000	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2017타경13807[중복]
2017타경 13876	1	서구 칠성로35번길6-10, 101동 5층 505호[쌍촌동,동남아파트] 60㎡[이정행지분2분의1전부]	아파트	70,000,000 70,000,000	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2017타경 15049	1	서구 시청로27, 101동 27층 2703호 [치평동,상무광명메이루즈] 84.9340㎡	아파트	350,000,000 350,000,000	
2017타경 65310	1	남구 서동로40번길3, 13층 1306호 79.44㎡	아파트	115,000,000 115,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7타경 10990	2	광산구 도산동 1104-4 264㎡	대	267,883,5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1104-4 1층99.43㎡ 제시외 화장실 등 25.1㎡	단독주택	267,883,500	
2017타경 15858	1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128-1 135㎡	전	34,656,1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수목포함.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담양군 대전면 성산길 25-22 88.83㎡ 36.57㎡[멸실] 제시외 주택 등 13.475㎡	단독주택	34,656,120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132 563㎡[물건번호1:최연실지분4분의1전부]	대		
2017타경 65693	1	화순군 도곡면 덕곡덕산길 24-2 62.5㎡ 부속건물 창고20.8㎡[현황멸실] 제시외 화장실 등 5.34㎡	농가주택	4,987,900 4,907,9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매각제외수목있음.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화순군 도곡면 덕곡리 26 784㎡[물건번호1:문숙희지분1/10전부]	대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7타경 15728	1	동구 산수동 406-10 한솔빌라 3층 302호 19.80㎡	다세대	21,000,000 21,000,000	
	2	동소 406-10 한솔빌라 3층 303호 19.80㎡	다세대	21,000,000 21,000,000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 6007 2017타경 14442 [중복]	1	영광군 영산면 봉남리 856-54 2883㎡[최효성지분3분의1전부]	대	11,532,000 11,532,000	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2	동소 1012-217 198㎡[제시외건물,냉동창고매각제외.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5,280,000 5,280,000	일괄매각
		동소 1012-219 132㎡	대		
	3	동소 600 645㎡	전	4,386,000 4,38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맹지
2017타경 10068	1	곡성군 경면 산정리 338-2 215㎡	대	3,397,000 3,031,500	매각제외수목있음
	2	동소 344-1 218㎡[이동가능한컨테이너매각제외]	대	4,272,800 4,272,800	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2017타경 13258	1	창성군 북일면 문암리 171 314㎡	대	13,645,000 13,645,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있음[매각제외].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동소 176 532㎡[물건번호1:56분의28[채무자이길순,이확술,이춘애,이종식각56분의7지분전부]]	대		
	2	동소 175 304㎡	전	18,441,200 18,441,200	일괄매각.수목포함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동소 179 1309㎡[물건번호2:56분의28[채무자이길순,이확술,이춘애,이종식각56분의7지분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017타경 13784	1	북구 용전동 105-2 755㎡[송익상지분3분의1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1,391,950 21,391,950	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2017타경 14176	1	나주시 동수동 14-42 823㎡	전	18,171,850 18,171,85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1증명서미납시보증금몰수]
		동소 산4-6 4415㎡[물건번호1:9/36[서정연지분36,최소현,최지현,최강익지분각2/36전부].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임야		
2017타경 15643	1	담양군 용면 추성리 662-4 2455㎡	답	68,249,000 68,249,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64799	1	남구 봉선동 568 374㎡[곽안웅지분374분의93전부.제시외건물있음[매각제외]]	전	12,369,000 12,369,000	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2017타경 64935	1	동구 계림동 1781 236.4㎡[매각외건물을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서종원지분19분의2전부]	대	13,186,400 13,186,400	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2017타경 65150	1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72-1 149㎡	전	51,247,000 50,247,000	일괄매각.매각대상아닌제시외수목있음.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71-1 129㎡	전		
		동소 74-1 132㎡	전		
		동소 76-1 370㎡	전		
		동소 73-1 162㎡	전		
		동소 75-1 129㎡	전		
	2	동소 9-1 2344㎡[농지취득자격증명요.매각외비닐하우스소재]	전	126,576,000 126,576,000	매각대상아닌제시외수목및건물있음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7타경 64409	1	남구 대남대로351, 3층 301호 [월산동,동강오피스빌] 314.52㎡	사무소	431,000,000 431,000,000	소유자[유]제이앤와이대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8. 3. 20.[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3. 27.[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6.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신호